‘3+3협의체’ 첫날부터 삐걱…“알박기 사퇴” vs “여가부 강화”

‘여가부 존폐·기관장 알박기 논란’ 견해차만 확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야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도 임기 일치 당위성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일단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부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알다시피 장관급 자리에 국정철학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하면 (임기 일치 논의도)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다. 논의 방향성만 이야기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첫 회의 참석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날 선 대립 이어가

의장 주재 회동서 본회의 개의 합의 무산
각 당 서로 자기 주장만 펴…견해차 확인

여야 원내대표들이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예산안 처리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있음에도 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내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안 열 것이냐”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의장께 국민의힘이 끝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이용빈, ‘무장애 5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 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무장애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진짜’ 책임자”

유가족 “특수본 수사 실무진에만 집중”…‘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왔다”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도 마약 등 범죄 대책만 수립해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특수본에 수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2022년 국회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올해 여름 수해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 일선 군장병 등에게 보내는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1일 오전 국회 헌정회 인근 ‘텃밭’에서 열린 행사에는 30여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그리고 농식품부 차관, 농협중앙회 회장, 한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장 나눔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1천 포기(약 3천500㎏), 수육용 한돈 500㎏, 햅쌀 500㎏이 준비됐으며, 김장은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동작구 수해피해지역 ‘삼성농아원’, 전남 해남 ‘해남겨자씨공동체’, 강원도 춘천의 노인복지관 등에 나눠 기증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